

與,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키로 “野 의회독재 막기 위해 원내투쟁”

추경호, 비공개 의원총회서
7개 상임위 수용 안건 상정
안건 추인 받은 뒤 사의 표명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키로 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대야(對野)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부쳐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추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을 의원들에게 추인받은 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면서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막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구성 여야 대화와 협치 국회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다.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이어 “절대 다수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이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정쟁으로 이용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도 민주당 손아귀에서 주물러진다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원내대표는 “쪽방촌, 교실, 종소기업 애환을 들으면서 국민의 삶을 구

석구석 챙기는 게 정치의 본령임을 깊이 기슴에 새겼다”며 “정쟁만 일삼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 오로지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단핵으로 겁박하고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맞서 더 쳐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를 수용함에 따라 이번 주 본회의에서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4파전에 ‘눈길’ vs 野 이재명 연임 전망

與, 한동훈 ‘무난한 당선’ 예상
친윤계 지목 따라 양상 달라질 수도
野, 李 당 대표직 사임…출마 염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외에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나경원·윤상현 의원의 4파전이 되면서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재명 대표가 사임하면서, 이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는 여당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당권도전 선언을 한 인사들이 들어나면서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여권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무난한 당선’을 예상한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나 당내 지지도, 인지도 등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당대회 구도가 ‘한동훈 vs 반(反)한동훈’이 되면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차기 당대표로 누굴 지목하는지에 따라 전당대회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날(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

해 눈길을 끈다. 원 전 장관이 ‘당정일체’를 이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친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BBS라디오에서 “(차기 당 대표는) 3년 후 대선에서 당정 일체를 강조하는 게 당원들의 생각에 부합할지, 아니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정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또대명(또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인물도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당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 18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한 행보로 풀이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당 역사상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사임을 발표하며 “개인적으로 당이나 전체 입장보다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태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대한 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임으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

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를 띠울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두 달 전쯤에 출범하는 걸 감안하면, 이번에는 이 대표의 사임 결정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린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이 대표의 연임이 예상되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전당대회에 더 시선이 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의 경우 이 대표 외에 거론되는 인물은 비록 5선 이인영 의원인데, 실제 당 대표 경선 출마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창렬 교수는 국민의힘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흥행 요소는 갖췄다면서 “적어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흥행이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이) 어떻게 서로 비판하고 이슈를 내냐에 따라서 흥행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맥 빠진 전대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당대회의 흥행은 당의 현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당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4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흥행이 아니라 이번 대표의 임기는 얼마나 되느냐는 자조가 나오는 마당에 흥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野 “순직해병 1주기 전 특검법 반드시 통과”

李 “핵심 당사자들, 증인선서 거부尹,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 것 특검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 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양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尹 “배터리공장 화재 인명수색·구조 총력”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 기하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인명 수색 및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 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자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한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1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불이 난 후 공장 내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인원은 20명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

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 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태홍 기자 pth7285@

팎으로 추정돼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준공된 이 공장에는 약 5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현재 인력 150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화재 진화에 나서고 있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 초기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최소 3만5000여개의 배터리가 (공장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추가 폭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 기자